

내포 시대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

- 도 정책자문위 복지보건분과 토론회...주제발표·토론 등 진행

충남도는 12월 3일 충남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정책자문위원회 복지보건분과 위원과 전문가, 도와 시·군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포 시대' 충남 복지 현실을 진단하고, 복지정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복지보건분과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공법석 도 복지보건국장의 기조발제와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충남의 복지보건 정책'을 주제로 한 1분과 토론회에서는 ▲이재완 공주대 교수가 '비선5기 충남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권경수 건양대 교수는 '충남 복지거버넌스와 지역복지의 현재와 미래'를 ▲류진석 충남대 교수는 '충남도 저소득 빈곤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나백주 건양대 교수는 '충남도 보건의료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분야별 사회복지정책'을 검토하고 발전 방안



을 찾기 위한 2분과 토론회에서는 ▲모선희 공주대 교수가 '충남도 노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석만숙 나사렛대 교수는 '충남도 장애인복지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최은희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연구위원은 '충남도 아동복지(보육·청소년) 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김영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충남도 여성, 다문화정책의 현재와 미래'를 각각 발표한 뒤 토론을 진행했다.

권희태 도 정부부지사는 이 자리에서 "복지정책은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행복을 위한 것이지만, 다양한 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예산 등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토론회는 내포시대에 맞는 민관협력 복지거버넌스 구축 등 충남복지가 한 단계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지원 전담부 서 가동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라 협동조합 활성화 대책 추진

충남도는 12월 2일 협동조합 설립 등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하는 등 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12월 1일부터 금융과 보험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과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누구나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협동조합 조기 정착과 도민들의 협동

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경제경제담당에서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도감독 등 제반 임무를 총괄 담당하며, 도민 인식전환 교육·홍보 등 협동조합 기반 및 생태계 조성을 중점 추진하게 된다.

또한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설립설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며,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정책연구 및 우수 협동조합 모델을 발굴하고 설립·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기존 1차 산업 중심의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해질 경우 서민·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충남도 2013년도 예산안 4조 9,413억원

충남도는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고 11월 6일 밝혔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조 9,500억원으로 금년보다 800억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367억원으로 780억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도청사 건립관련 특별회계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금운용계획도 3,546억원으로 금년보다 238억원 증가하였다

2013년도 예산편성의 특징은 민선 5기 하반기 중점과제인 복지, 문화, 경제 및 3농혁신분야의 정책수요와 내포 신도시 조성, 도청사 건립 마무리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더불어 행복한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 영유아 보육서비스 기반확충, 의료급여 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 등 1조 1,97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전통과 현대가 조화로운 선진 문화관광 구현을 위해서는 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체육기반시설 확충 및 지원, 서해안권 광역 관광지 개발, 지역문화축제 육성 등 1,451억원을 편성하였고 사람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가능 경제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1,41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3농 혁신을 통한 도민이 살아가는 농촌 건설을 위해 고품질 브랜드쌀 소비촉진 기반구축, 초·중학생 무상급식, 농촌생활환경 정비 등 6,654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청사 건립 마무리 및 내포신도시 기반구축비로 내포신도시 복합 커뮤니티, 충남 보훈회관 건립, 보건의료연구원 청사이전 신축 도청사 건립 및 신도시 진입도로 개선 등 479억원을 반영하였다

도는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도민의견을 수렴·반영코자 도민참여예산위원회와 도정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자체사업 예산편성관련 자문을 거쳤으며 도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ARS 전화설문, 정책 서포터즈 우편설문 등을 통해 모아진 제안 사업들은 실국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적극 반영하였다.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우뚝

- 도착금액 비율 1위 등 따라...
2002,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충남도가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11월 1일 외국기업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지난 2002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번 최우수 기관 선정은 도의 실질적인 외국인 투자유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데다, 교육·의료 부분 강화와 자체 투자유치 업무기준 마련 등 투자유치 기반 확대 및 도약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탁월성을 인정받음에 따른 것이다.

주요 공적을 보면, 도는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1건 5억6600만 달러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했다.

같은 기간 신고금액은 58건 7억3600만 달러, 도착금액은 9건 6억9900만 달러로, 신고금액 대비 도착금액 비율이 95%를 기록하며 전국 1위에 올랐다.

도는 또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투자지원센터 설립 추진 ▲외투기업협의회 활성화(간담회 6회) ▲외국기업 전담 병원(천안 단국대) 지정 등 외국인 투자유치 기반을 넓히기 위한 교육·의료 분야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투자유치를 위한 4대 항복(경세효과, 환성성, 반외자 정서, 인센티브) 검토대응 ▲한·미간 투자자국가소송제(ISD) 대비 MOU 포



준안 마련 ▲고용창출·지역민 우선 고용·사회적 책임 명시 등 투자유치 입무기준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상생산업단지 추진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3개소 지정 투자유치 제도 개선 및 분체점 처리(88건) 등 유치한 외국인 기업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중점 추진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전국 최우수 기관 선정은 한번 충남을 찾은 외국인 투자자는 또다시 충남을 찾고, 충남에 자리 잡은 기업들은 도내에 뿌리 내리고 성장을 거듭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유치 전략'이 빛을 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기업이 함께하고, 환경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외국인 기업 투착화에 수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